"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로 세대 간 정보 격차 줄여야"

'디지털 포용 격차해소 방안' 토론회
부처간 디지털 시너지 융합해야
제도 정비, 시민 리터러시교육 등
범국가 디지털시민역량 정책 필요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 토론회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나인 기자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포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 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 디지털 시민역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자리다.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섰고,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과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또 김양은 건국대학교 교수·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장·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 디지털 양극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ICT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디지털 포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부처의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디지털시민역량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시너지를 융합하고 정책 등을 지원할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도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CT를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정책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유럽 등은 '스마트 시티즌'을 통해 ICT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디지털 시대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협회장은 "디지털 포용의 반댓말은 디지털 배제"라며 "디지털 사회라고 하지만 막상 디지털을 잘 쓰는 교육은 하지 않는다. 디지털을 올바르게 쓰는 디지털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나이,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건물을 짓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디지털 사회에도 이뤄져야 혁신적 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날로그도 병행이 되는 디지털 환경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오토바이 경적 시위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연합뉴스

현대重 노조, 주총무효 소송에 파업까지

노조 "주주들 참여 보장 안돼 위법"
사측 "장소변경 불가피, 문제없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통과 이후 장기 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주총 무효 소송 준비와 함께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매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금속노조 법률원 주관으로 주총 무효소송에 돌입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노조는 주주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주총무효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현대중공업의 주총이 주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위법이라 보고 당시 주총에서 처리된 법인분할 안건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당시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원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재 사측의 법인분할에 반발해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크고 작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사측이 법인분할 주총을 강행한 이후 추가 파업에 나서는 등 장기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노조는 11일 오후 1시, 12~13일은 오전 8시, 14일은 오후 1시부터 각각 4시간 부분파업하고 법인분할 무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가 이번 주 중에 재개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현장실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3일 노조 반발로 무산된 뒤 아직까지 재시도 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마음회관에서 있었던 노조의 기물파손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실사는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확실한 일정은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에 정치권도 입을 열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위법성과 사측폭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핀란드·스웨덴에 스타트업 북유럽 거점

文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
美 시애틀·印 구르가온 이어
핀란드·스웨덴에 KSC 설치

핀란드와 스웨덴에도 한국 스타트업 거점이 생긴다.

올해 8월 말 미국 시애틀과 9월 인도 구르가온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유럽의 스타트업 강국에도 2곳이 추가로 오픈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 기업혁신부와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 각각 들어설 KSC는 내년에 문을 연다.

핀란드는 글로벌 기업 노키아가 위기를 겪은 후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며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과 '앵그리버드' 등이 탄생하며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슬러시(SLUSH)'도 열고 있다.

유니콘 기업을 9곳이나 배출한 스웨덴은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이 결합한 소셜벤처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손꼽힌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KSC 설치뿐만 아니라 양국의 창업생태계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 구축 및 한국 스타트업의 북유럽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북유럽 진출거점으로 조성될 KSC는 IR 행사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유오피스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는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해외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현지에서 핀란드 경제고용부와 MOU를 체결한 박 장관은 오후엔 알토대학교 안에 위치한 알토 디자인 팩토리와 스타트업 사우나를 방문하고, 한누 쎄리쓰퇴(Hannu Seristo) 대외협력 담당 부총장 등 담당자에게 KSC의 성공적 운영과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알토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알토대학교는 핀란드 창업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스타트업 사우나, 알토 디자인 팩토리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알토대학 내 창고를 개조해 만든 스타트업 허브이자 코워킹스페이스인 스타트업 사우나는 연간 100회 이상 피칭, 해커톤 등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알토 디자인 팩토리는 연간 4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관련 교육, 연구 등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게임개발자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중독 기준은 오류"

게임개발자協 등 반대 성명서 제출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게임업계 종사자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의학계의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게임 중독 논문들이 사용하는 중독 진단 척도가 20년 전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게임 행위와 중독간 인과요인의 분석에 대한 의약학 연구 이외에 사회과학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은 건전한 놀이이자 영화나 TV, 인터넷, 쇼핑, 레저 스포츠와 같은 취미·여가 문화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개인의 건전한 놀이나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으로 취급하면 제2, 제3의 게임질병코드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선별도구로 개발된 게임 중독 진단 척도 기준(IGUESS)의 오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임 중독 진단 척도로 삼는 자가문진으로 개발된 내용이 1988년에 개발된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평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가문진을 해도 '잠재적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비상식적 결과를 유발한다"며 "2014년 이후부터 진행된 수백편에 달하는 게임 중독 연구 논문들의 연구비가 지난 수년간 250억원이나 소요되는 정부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중독정신 의학계가 게임 중독을 규정하려면 우선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어떤 논문에서도 게임 이용 패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